

1.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개헌 반대 (정치)

■ 목표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탄핵으로 인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가 위협받고 있다. 친북한 정책으로 인하여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하고 있고, 친중국 정책으로 인하여 한미일 동맹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근거가 되었던 손석희의 JTBC 태블릿 PC는 조작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현재 이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의결, 현재의 탄핵 판결에 사용된 증거들이 문제가 있음을 규명하여, 탄핵이 잘못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서 보듯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관련자가 도지사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가 훼손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아야 사법질서가 제대로 정립될 수 있다.
- 조국 전 장관의 가족 비리 문제와 울산시장 선거에 정권이 개입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코로나19(우한폐렴) 문제로 인하여 거론이 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 특검과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 시장경제질서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굳건히 하는 것만이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개헌 논의는 내각제 개헌을 통해 통치체제를 변환하고, 나아가 연방제 도입을 하기 위한 시도이다. 따라서 친박신당은 이러한 도전에 단호히 대처한다. 이를 위해 “개헌저지투쟁 국가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개헌을 반대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 이행방법

- ①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탄핵 바로잡기 운동
- ② 박근혜 대통령 석방 운동
- ③ 국민발안제 개헌(안) 반대 ~ 개헌저지투쟁 국가비상대책위원회 활동 강화
- ④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 ⑤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 정당의 위헌소송 제기/무효화 운동
- ⑥ 공수처법 폐지
- ⑦ 태블릿 PC 조작 의혹에 대한 재수사
- ⑧ 드루킹 사건의 관계자에 대한 엄벌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⑨ 조국 사태에 대한 조속한 재판 진행을 통한 법치질서 정립
- ⑩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감사 및 특검 도입

■ 이행기간

- 즉시 시행

■ 재원조달방법 등

- 별도 재원 불필요

2. 한미일 동맹 강화와 북핵 폐기 (국방·안보)

■ 목표

-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친중정책, 퍼주기식 대북정책의 문제점은 잘 알려져 있다.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사드 배치는 지연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중국에 대한 조치는 소극적이다. 또한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도 속수무책이다.
-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을 지원하려고 시도하지만, UN의 대북제재로 인하여 이러한 시도는 좌절되고 있다.
-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지속되고 있으나, 우리의 방어태세는 바뀌지 않고 있다, 한미 군사훈련은 축소되고 있고, 일본과 갈등구조는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된다면 우리의 안보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 북한의 위협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어떠한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중국은 북한의 편을 들 것이므로, 중국에 의존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이러한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은 국방력을 강화하여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이전에는 어떠한 경제적 협력도 하지 말아야 한다.
- 우리의 안보는 기존의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여,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이행방법

- ① 주적 개념을 명확히 정립 ~ 북한과 북한의 직접적 지원세력
- ②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대화는 북핵 폐기 후에
- ③ 한미일 군사동맹 체결
- ④ 한미 군사훈련 재개
- ⑤ 미사일 방어 체제 참여
- ⑥ 사드 추가 배치
- ⑦ 대북 지원은 인도적 차원으로 한정
- ⑧ 무기 현대화를 통한 전력 강화
- ⑨ 무기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역량 강화
- ⑩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대응 역량 강화

■ 이행기간

- 북한의 핵위협이 완전히 사라지는 때까지 지속

■ 재원조달방법 등

- 기존 국방예산의 집행 분야를 변경
- 무기 개발과 사이버 전력 개발을 위한 기능 강화

3.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 등 (정치·재정경제)

■ 목표

- 문재인 정권이 시작된지 3년도 되지 않았지만 각종 경제정책은 바람직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퍼주기식 복지정책은 나라 재정을 고갈시키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성장은 고사하고,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은 줄어 들고 국민의 삶의 질은 나빠지게 만들었다.
- 심지어 2019년의 국민소득은 전년 대비 4.1%가 감소하였다. (2018년 \$33,434에서 2019년 \$32,047) 이렇게 국민소득이 감소한 것은 원·달러 환율이 5.9% 상승한데 기인한다고 하겠지만,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 중국에 대해 저자세로 일관하는 친중국 정책으로 인하여 국가안보를 위한 사드 배치는 지연되었고, 이와 관련된 중국의 사실상의 보복으로 인하여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보았지만, 정부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서도 반복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이다.
-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과격한 정책으로 인하여 기업과 국민들이 입은 피해는 언급할 필요도 없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하여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도입한 태양광 발전은 환경훼손이라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 물론, 총선 이후에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 친박신당은 국가경제를 피폐하게 만드는 문재인 정권의 각종 경제정책을 파기하여 새로운 경제질서를 구축하고, 사회주의 경제가 아닌 시장경제 질서를 확실히 할 것이다.

■ 이행방법

- 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관련 책임 소재를 규명
- ② 최저임금 인상율은 물가상승율에 연동시켜 급속한 인상의 피해 최소화
- ③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의 법적 강제성 폐지
- ④ 무분별한 퍼주기식 각종 복지제도의 재정비
- ⑤ 탈원전 정책의 포기 및 관련 정책 수립의 책임소재 규명
- ⑥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재개
- ⑦ 설립 추진 중인 한전대학을 원자력 기술 위주로 육성
- ⑧ 산림 등 환경을 훼손한 태양광 발전소 해체
- ⑨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비리에 대한 특검 및 국정조사 추진
- ⑩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 근로소득세 전액 면제

■ 이행기간

- 각종 제도개선은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법 등

- 원자력발전 건설 등에 소요되는 재원은 한전이 자체 해결 가능
- 소요재원은 퍼주기식 복지에 지출되는 예산을 재활용

4. 사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 “공장을 다시 한국으로” (산업자원)

■ 목표

- 많은 기업이 생산거점을 인건비 등 비용이 저렴한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인건비가 비싸진 중국에서도 이미 철수하기 시작하였고, 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베트남, 동남아, 인도로 이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적인 것이라고 속수무책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 기업이 생산기반을 해외로 이전하게 되면, 국내의 좋은 일자리는 자연히 줄어들게 된다. 실업률은 상승하게 되고, 근로자의 소득은 줄어들고 살기 힘든 나라가 된다. 규제를 줄이겠다는 말만으로는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없다. 실제로 규제를 줄여서, 기업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
- 트럼프 대통령처럼 해외로 빠져나간 생산기반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오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한국을 사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꿔서 해외로 간 공장을 다시 한국으로 불러와야 한다. 『사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친기업 정책을 도입하고 잘못된 경제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문제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동산 규제 정책을 도입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인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면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경제개발 초기에 만들어진 전기소비를 줄이기 위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휘발유 소비를 줄이기 위한 유류세 제도 등도 시장구조를 왜곡시키고 있다. 이러한 왜곡된 조세제도부터 고쳐야 시장경제질서를 회복시켜 사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 이행방법

- ① 『사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운동 전개
- ② 공장을 다시 한국으로 가져오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 ③ 미군공여지를 활용, 수도권에 차세대 산업육성을 위한 연구단지 조성
- ④ 물류비용 경감을 위해 산업용 교통망 신설
- ⑤ 부동산 정책은 집값 인상 억제에서 공급 확대 위주로 개편
- ⑥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한 각종 규제 정책 폐지
- ⑦ 왜곡된 전기요금 구조 바로잡기 ~ 가정용 누진제 폐지
- ⑧ 왜곡된 유류세 구조 바로잡기 ~ 휘발유 중과세 폐지

■ 이행기간

- 각종 제도는 즉시 개편
- 수도권(강북지역)에 대한 규제해제는 즉각 시행, 연구단지 건설
- 『사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운동을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은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법 등

- 기존 예산 활용
- 필요한 경우 민자유치

5. 전교조 폐지 등 교육제도 혁신 (교육)

■ 목표

- 어린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바람직한 미래사회를 창출해 나갈 수 없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전교조가 생기면서 좌경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두고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따라서 전교조부터 폐지하여야 한다.
- 우리의 생활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지만, 교육시스템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AI(인공지능) 시대가 되었지만, 학교에서는 AI와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는 별로 없다. 이제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부터 양성해야 한다.
- 빠른 환경변화에 적응하려면 기존 세대에 대안 지속적인 재교육은 필수 요소이다. 1980년대에 컴퓨터가 우리 사회에 도입되고, 21세기에 인터넷, 2010년대에는 스마트폰 시대가 전개되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바뀌는 현대 사회에 적응하려면 평생교육제도는 일 자리 유지와도 관련된다.
- 저출산의 영향은 교육제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생수가 줄어들어 교육 수요는 감소하고 있지만, 학교는 그대로 존재하여 공급은 변화가 없다. 결과적으로 공급초과가 되어서 각급학교에 대한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차세대를 위한 미래지향적 교육은 기대하기 어렵다.
- 미래지향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려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하려면 대학입시제도도 매년 바뀌어서는 안 된다. 대학입시제도도 시장 기능에 맡겨서,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정착되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행방법

- ① 미래지향적 교육을 위하여 전교조 폐지
- ② 국정교과서 제도 변경. 객관적 역사교육 추진
- ③ 시장기능에 의한 대학입시제도의 정착
- ④ 사립대학의 통·폐합, 퇴출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편
- ⑤ 교육감 직선제 폐지
- ⑥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AI 등 기본 기술 교육 강화
- ⑦ 평생교육시스템을 강화하여 성인들에게 실질적인 재교육 제공
- ⑧ 현재 6년제인 초등학교 과정에 유치원 과정을 추가 설치
- ⑨ 고등학교 교육에 직업 교육제 강화

■ 이행기간

- 사안별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도개선 후 시행

■ 재원조달방법 등

- 기존 교육관련 예산 집행을 재조정

6. 양극화 해소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활성화 정책 (재정경제 · 기타)

■ 목표

-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의 과정에서 빈부격차 문제는 점점 심각해 지고 있다. 빈부격차 문제는 교육 분야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거대기업의부의 세습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지만, 문재인 좌파 정권은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빈부격차는 더 커지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잘못된 정책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으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받고 있다. 소상공인의 몰락을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이 나라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봉착하였다.
- 대기업의 사업영역 확대로 인하여 중소기업은 설 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고서는 국가 경쟁력 강화도 어려운 현실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여야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 빈부격차는 연금제도에서도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의 수급액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비교할 때 확연히 작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좌파정권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심지어 모른척하고 있는 상황이다. 빈부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것이다.

■ 이행방법

- ① 거대 재벌기업의 부의 불법 세습을 차단하는 제도 마련
- ②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 강화
- ③ 최저임금위원회에 자영업 · 소상공인 대표 참여를 보장
- ④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 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 마련
- ⑥ 중소기업에 유아 돌봄 서비스 제공 지원 확대
- ⑦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확대
- ⑧ 최빈층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액 상향 조정
- ⑨ 국민연금 수령액을 증액 (더 내고, 더 받기)
- ⑩ 빈부격차 문제 해소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공공 연구기관 신설

■ 이행기간

- 즉시 시행

■ 재원조달방법 등

- 기존 편성된 예산을 활용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등에 필요한 예산은 추가 편성

7.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 (여성·기타)

■ 목표

- 한국사회는 인구사회적 측면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고령화, 다른 하나는 저출산이다.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건강 상태가 개선되면서 노인들의 사망률이 저하되면서 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젊은 층은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안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출산을 회피하여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 고령화 현상은 사회가 발전해 나가면서 생기는 자연적 현상이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식을 양육 하는데 전력을 기울였고, 노후에 대한 대비책은 세우지 못한 사람이 태반이다. 노후대책은 빈약한 국민연금과 국가의 지원이 유일한 경우가 많이 있다.
- 저출산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인구감소로 연결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경쟁력의 약화로 나타나게 된다.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꺼리게 되고, 여성들이 육아 문제 등으로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현상은 이미 현실화된 사실이다. 이러한 일들에 정부는 관심을 기울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문화 가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문재인 좌파정부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한 퍼주기식 복지제도만으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결혼한 청년들에게 주택을 마련해 준다는 미봉책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 정책의 근간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한다.

■ 이행방법

- ① 평생교육제도를 정비하여 노인들에게 필요한 기술 습득기회 제공
- ② 생활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격차를 해소
- ③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되는 주택연금제도 시행
- ④ 고령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단지 개발
- ⑤ 은퇴한 고령층에 대한 주택 보유세 및 양도세 경감조치 시행
- ⑥ 대기업의 아이 돌봄 시설 의무화
- ⑦ 공공 유아 교육기관 설치 확대
- ⑧ 결혼한 청년들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제공 확대
- ⑨ 중고등학교의 공교육 체제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
- ⑩ 다문화 가족의 자녀를 위한 다문화 교육 기회 확대

■ 이행기간

- 제도 개선 후, 즉시 시행
- 인프라 개선이 필요한 경우 마스터 플랜 수립

■ 재원조달방법 등

- 기존 분야별 예산 활용
- 인프라 구축은 민자유치

8.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 만들기 (보건복지 · 환경)

■ 목표

- 코로나19(우한폐렴)의 대처방안에서도 초반부터 잘못 되었다. 코로나19의 발생지인 중국에 대한 여행객 통제를 소홀히 하여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대구 신천지를 시작으로 구로 콜센터, 해양수산부 등 집단감염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전세계적으로 130개국 이상이 한국 여행객의 입국금지, 격리 등 통제를 하고 있다.
-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도 연중행사가 되고 있다. 금년은 중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세먼지의 유입이 적었지만, 매년 미세먼지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다. 특히 탈원전 정책으로 인하여 원자력발전소의 비중을 줄이고,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이 증가하면서 미세먼지의 발생량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 4대강 주변의 보를 철거하거나 개방하는 정책으로 인하여 물부족 사태를 겪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한강 개발 이후에 한강이 깨끗해지고 수량도 충분히 졌다. 한강에 보가 수없이 많지만 이를 철거하거나 개방하며 물을 바다로 흘러 보내자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도 문제인 좌파정권은 지난 정부에서 한 4대강 개발을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 탈원전 정책은 또 다른 환경파괴를 낳고 있다.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소의 건설을 위해 산을 깎는 경우가 많이 있다. 태풍 등 강풍이 불면 취약한 구조인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위해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환경이 파괴되면 다시 회복하는데는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것이다. 잘못된 정책으로 환경이 파괴되면, 후손들에게 살기 힘든 나라를 만들어 주는 것이므로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 이행방법

- ① 코로나19(우한 폐렴)과 같은 전염성 질환의 발생시 대처 방안 마련
- ② 전염성 질환의 발생지에 대한 여행 금지 등의 원천차단 법제화
- ③ 마스크 부족 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서 공급책 마련
- ④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 또는 감축하고 원자력발전의 즉각 재개
- 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경유 차량의 감소를 위한 정책 수립
- ⑥ 미세먼지의 주발생지인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 시행
- ⑦ 4대강 상류에 댐 구축을 통해 수자원의 안정적 관리기반 조성
- ⑧ 4대강 주변에 정수시설 신설 등 4대강 개발의 마무리 정책 수립
- ⑨ 산을 깎는 등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의 즉각 철거
- ⑩ 훼손된 환경의 원상회복 및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

■ 이행기간

- 각종 제도개선은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법 등

- 원자력발전 건설 등에 소요되는 재원은 한전이 자체 해결 가능
- 소요재원은 퍼주기식 복지에 지출되는 예산을 재활용

9. 제4차 산업혁명 육성 ~ 제2의 한강의 기적 만들기 (과학기술정보통신)

■ 목표

- 전세계적으로 기술발전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구조로 인하여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좌절되고 있다. 미국 등 외국에서는 도입된 차량공유, 주택공유 사업 등이 한국에서는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 과거 산업혁명 대열에 동참하지 못한 결과는 일본에게 나라를 36년 동안 빼앗긴 역사로 나타난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후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통하여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 “한강의 기적”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냈고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다. 만일에 지금 이해관계에 얽매어 제4차 산업혁명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 번 경제적인 속국이 되어 쓰라린 과거의 경험을 다시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 AI(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은 산업구조를 급격하게 바꾸어 놓게 될 것이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기존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과거 산업혁명 초기에 잃어버린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 기계를 부수면서 저항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라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 마련도 신경써야 한다.
- 제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산업의 흐름이며, 이를 선도해 나가야 우리의 미래가 밝게 열린다는 것을 알리고 국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러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새로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교육을 강화하여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이러한 일을 통하여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경제적 강국으로 만드는 지름길이다.

■ 이행방법

- ① 실질적인 스마트 공장 도입을 위한 지원정책 수립·시행
- ② 무인자동차/드론 시대를 대비한 각종 법·제도 정비
- ③ 무인자동차/드론 관련기술 개발을 위한 국책 연구기관 신설
- ④ AI(인공지능), 로봇 기술 등을 가르치는 전문 교육기관 육성
- ⑤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종합 Test-Bed 구축
- ⑥ 일자리를 잃게 되는 분야의 종사자들에 대한 종합 대책 수립
- ⑦ 공유차량, 공유주택 등 신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 철폐
- ⑧ 공공분야 연구기관, 학교 등을 제4차 산업혁명에 특화
- ⑨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스타트업에 대한 세제 등 각종 지원책 마련
- ⑩ 제4차 산업혁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이행기간

- 필요한 제도개선은 즉시 시행
- 육성에 필요한 각종 지원 사업은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종합적으로 시행

■ 재원조달방법 등

- 교육, 산업지원 분야의 예산의 집행 계획을 변경하여 재원 조달
-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는데 걸림돌을 제거하여 해외투자 유치

10. 균형예산 편성 및 작고 강한 정부 (재정경제 · 기타)

■ 목표

- 무분별한 퍼주기식 복지제도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자가 급증하고 있다. 2020년도 적자예산으로 인한 국채발행 규모는 60.2조원이고, 여기에다 연초에 편성되는 추정 11.7조원을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수자가 된다. 이러한 것은 문재인 좌파정권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 제대로 된 정부는 균형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세입의 범위 내에서 세출 예산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정부의 지출규모를 줄여야 한다. 즉 작은 정부가 되어야 한다.
- 공공부문의 각종 연금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문제점이 있다. 공무원연금은 물론이고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각종 연금에 대한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현재 적자로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이다.
- 신문 · 방송도 특정 좌파이념에 편중되어 있고, 보도의 보편성도 상실하고 있다. 코로나19(우한 폐렴)이 발생하였을 때 방송은 다른 보도는 소홀히 하고 단지 코로나19 만을 중점 보도하였다. 또 교통방송은 특정 이념에 편중된 방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편성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국가 ·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방송사(공영방송)는 민영화하여 방송시장에도 경쟁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 이행방법

- ① 2021년 예산부터 균형예산 편성
- ② 작은 정부의 구현을 위해 부서 통폐합
- ③ 복지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한 국채발행 없는 복지예산 집행
- ④ KBS2(채널 7)는 KBS에서 분리하여 민영화 (매각)
- ⑤ MBC에 대한 방송문화진흥원의 소유지분은 민영화
- ⑥ 교통방송의 서울특별시의 소유지분은 민영화

■ 이행기간

- 지속 추진
- 공영방송 민영화는 즉시 시작하여 완료될 때까지

■ 재원조달방법 등

- 작은 정부 구현에는 별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음